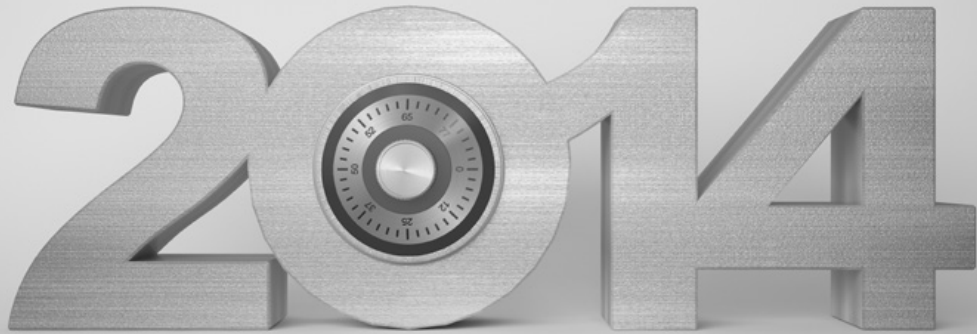


# 2014년 전기계를 돌아보다



청말띠 해를 맞아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뎠던 2014년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2014년은 전력산업계에 있어 어떤 해였을까. 소위 직장 생활을 오래한 고참 직원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능숙함과 여유가 묻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신입사원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좌충우돌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2014년은 그런 신입사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익숙해질만 하면 환경이 급변하며 낯선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되돌아본다.

## 지방 시대를 열다

올 한 해 가장 많은 뉴스 중 하나는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내용이었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지 10여년이 흐른 올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전력그룹사들의 이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우선 공기업들의 본격적인 지방 이전에 앞서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2일 '세종청사 현판식'을 가지며 그 시작을 알렸다. 전력그룹사 역시 4월 남동발전의 이전을 시작으로 12월 한전까지 이전을 마쳤다. 이전 계획이 늦춰진 한수원,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전기술을 제외한 모든 전력그룹사가 지방 시대를 연 것이다.

가장 먼저 남동발전이 올 4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고, 7월에는 동서발전이 울산우정혁신도시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남부발전도 10월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부산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빛가람)로 이전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이전과 관련,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현대차그룹에게 10조 5,500억 원에 매각하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빛가람에는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도 이



2014년은 전력공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사진은 한전의 나주 사옥 전경.

전했다. 전력거래소는 10월부터 빛가람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0월 6일 오후 3시부터 전력계통 운영·관제 기능이 서울에서 나주로 변경됐다.

한전KPS도 빛가람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나주 시대 개막을 알렸으며, 한전KDN도 12월 7일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빛가람은 전력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됐다. 특히 한전은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산·학·연 R&D 협력 확대, 인재양성, 에너지기업 복합단지조성, 에너지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특화된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간다.

나머지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중심발전소가 위치한 보령과 태안으로, 한수원은 경주로 각각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 해는 전력공기업에게 있어 지방 시대를 연 원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 설렘이 먼저 다가오기 마련인데, 마냥 그렇지만도 않다.

이전 지역 주변에 주거공간,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상당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으

로, 의도치 않은 기러기 생활도 생각보다 오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각 기관 간 업무 협의를 하는데 있어 시간·거리상 불편함은 큰 골칫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인재 채용에 있어 지방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 전력수급 안정화 찾다

최근 몇 년간 전력산업계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었다. 2011년 발생한 순환 정전 사태 이후로 매년 전력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올 해는 큰 위기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력수급에 있어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신규 발전기 준공이 차질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가장 먼저 남동발전의 800MW급 영흥화력 5호기가 1월부터 전력생산을 개시하면서 숨통을 틔워줬다. 이어 영흥화력 6호기도 7월부터 시운



영흥화력 5,6호기 등 발전설비들이 속속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올 해는 특별한 전력수급 위기 상황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전을 개시했다.

동서발전의 울산 4복합화력 증기터빈, 서부발전의 평택2복합화력 증기터빈도 각각 7월, 10월부터 전력을 생산하며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남부발전의 417MW급 안동천연가스발전소도 7월 준공하며 힘을 보탤다.

발전회사들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계 최대전력 수요 발생 시점 이전에 대부분 완료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점도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올 여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지 않아, 8월 최대전력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7,069만kW에 그친 것도 전력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 당시 전력공급능력은 8,223만kW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며 예비율은 16.3%를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사용 제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물론 발전소 불시 고장 등 전력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가동되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 발전소의 송전선로에 대한 특별 점검, 적극적인 수요관리 시책 시행 등이 숨은 조력자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비리 사태 여파 지속

원전 비리 사태는 올 해도 여파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LS가 1월에 원전 케이블 품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계열사 JS전선을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하면서 JS전선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됐다.

같은 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원자력안전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올 해 원전 규제에 대한 고삐를 더 쥘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및 협력업체들은 3월 원전사업자 안전현장 선포식과 원전안전 워크숍을 개최, ‘국민 원전 안심 시대’를 이끌어갈 것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7월에는 내년 1월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산업부장관 고시가 제정, 고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해 역시 고리 3,4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전의 정비보수 품질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태는 지속됐다.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은 안전현장 선포식을 갖는 등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펼쳤다.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에서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되다 적발됐다. 10월에는 한수원 직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여파는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도 여실히 반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원전 비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1월에는 대법원에서 원전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한수원, 새한TEP, 한전기술 등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부분 확정하며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의 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편 11월에는 한전KDN 직원들이 2년간 허위 출장비 11억2,000만 원을 착복 및 상납하고 임원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허위 자문료를 지급한 비리 행태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에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돼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 마른 수건 짜고 또 짜고...

매년 그러했지만 특히 올 해 전력그룹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부채 감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정부가 기관장 해임건의 등 강력한 조치를 내세우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으로 부채 감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 중간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 발전6사, 가스·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전력·에너지공기업은 오는 2017년까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약 20조 원을 줄이는 이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의 여파로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매우 박한 점수가 매겨졌다. 정부가 6월 밝힌 평가 결과 전력그룹사의 경우 2012년 B등급을 받았던 한전은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한수원은 D등급에서 최하인 E등급으로 추락했다. 2012년 A를 받았던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C등급으로 2단계가 떨어졌으며, 동서발전과 서



한전 등 전력그룹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부채 감축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부발전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중부발전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그나마 10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부채중점관리 기관 중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철도시설공사, 한전, 한수원,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순서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 큰 위안이 됐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광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개혁방안은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전, 발전5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관련성이 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앞으로 전력계 노조의 반발 등 커다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기업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편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력계를 한바탕 회오리 속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 전력설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여전

전력설비를 건설하는데 있어 민원 등 사회적 갈등

이 표출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 가장 단적인 사례는 밀양 사태이다. 밀양시를 지나가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당초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밀양지역 일부주민의 반대로 준공이 3년여 동안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10월 2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미시공 구간인 밀양시 4개면 52기 철탑공사를 불가피하게 재개한 바 있다.

재개 과정에서 일부주민들과의 마찰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행히 올 해 9월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소재 99번 철탑 조립 완료로 끝으로 밀양시 5개면(단장, 산외, 상동, 부북, 청도면)을 지나는 총 69기에 대한 철탑 조립을 완료함으로써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수많은 상처와 함께 향후 전력설비 건설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그런 가운데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제정돼 본격 시행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또한, 1월 한전과 청원군 주민대표 간에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사례는 외부단체의 개입 없이 이해당사자들 간 직접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된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에서의 갈등도 있었다. 특히 삼척의 경우 10월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원전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 84.9%가 반대를 표명했다고 발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 사실이다.

이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영덕에서도 반대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영덕-경북도-한수원 등이 11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11월 한수원과 울진군이 15년간 타결하지

못했던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과 관련해 합의한 것은 향후 원전사업의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 전력산업계 '통일' 논의 본격화

올 해 전기계에 있어 가장 'Hot'한 이슈 중 하나는 '통일'이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력산업계도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무엇보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전력산업계 입장에서 통일은 가장 큰 '대박'이 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언제 될 지는 요원하지만, 통일 이후 전력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진 것이다.

먼저 전기공사협회가 7월 '전기분야 통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위원회는 남과 북을 잇는 민간 차원의 전력인프라 구축 방안을 비롯해 전기관련 용어 통일 자문 등 민간 주도의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며, 각종 기



올 해 전력산업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술기준과 시공기준 표준화 자문 등의 활동도 펼친다.

9월에는 전기산업진흥회가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는 앞으로 북한 전력계통 및 전력기자재 시스템 조사연구와 남북전력기자재 관련규정 및 표준화 비교연구, 남북 전기산업 기술 및 인적교류 방안 강구, 장기 로드맵 수립과 정책지원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전력산업계의 통일에 대한 준비는 올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민간 차원의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진척될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간다.

### 배출권거래제 논란 속 시행 확정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올 초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이 1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특히 경제계가 신중론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9월에는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 톤으로 확정됐다. 이중 발전·에너지 분야의 할당량은 7억3,585만2,571톤이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에너지수요 정책과의 연계, 국제 공조 체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초기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각 계에서 제시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대한 빨리 보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올 한 해의 특징을 큰 틀에서 정리해보면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화했다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전력수요를 전력설비의 확충이 아닌 수요관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확고히 정립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나 전력산업계에서는 올 해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에너지저장장치(EES), 신재생에너지,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등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시장을 창출하는데 노력했다.

민원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여기에 산업의 에너지 저소비 형태로의 변환, ICT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면서 그 변화는 확고해졌다.

올 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아졌다면, 내년부터는 기동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즉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해의 이러한 변화가 내년부터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